

大學 設立은 自由롭게

柳 一 相
(建國大 新聞放送學科)

表出안된 輿論의 해프닝

지난 4월 어느 조간 신문에 조그만 칼럼을 쓰고 있을 때의 일이다. 그 신문의 발행 부수가 엄청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필자는 의외로 폭넓고 빠른 독자 반응 때문에 어안이 빙빙해 진적이 있었다. 표제와 같은 제목으로 된 원고지 5~6매 분량의 짧은 글에 쏟아졌던 관심이 워낙 컸기 때문에 필자는 말 그대로 미상한 느낌을 받았다.

필자에게 물어 물어 전화를 건 사람이나 편지를 보낸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였다. 한 부류는 막대한 資本을 投資하여 대학교육 사업을 벌여 보겠다는 의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좁은 문으로 비유되는 대학 입시 당사자들의 주변 인물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대학 설립은 당연히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데 모아지고 있었다. 물론 필자는 필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보내 온 사람들이 여론을 대표한다고 믿지 않으며, 그들이 어쩌면 오랜만에 동조 세력을 만났다고 기뻐하는 극소수일런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그들은 자신이 말 못하는希冀을 필자가 대신 말해 주

었기 때문에 고마움을 견해 필자에게 격려를 보내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보태어 추후의 논변에 논거를 보강해 주려는 소박한 뜻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들의 피드백(feedback)을 소중히 받아 들이면서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대학 문제를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 보았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그들의 반응은 대학이 부족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이었고, 대학의 缺乏을 해결하기 위해 한 방법을 제시한 필자에게 좀더 현실성 있는 대안을 연구해 보라는 꾸지람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필자는 대학교육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식이라는 사회적 통념에 입각하여 이미 입론한 바 있는 ‘大學 設立의 자유’에 대해 논리적 검토를 보태는 글을 쓰고 싶었다.

大學의 좁은 문은 문제거리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문은 말할 수 없이 좁다. 한 해 졸업생의 약 20% 정도가 대학에 진학할 뿐 약 80% 정도의 고교 졸업생이 대학 문전에서 박대를 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대학에 낙방한 수 많은 재수생이 입시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고교 과정을 복습해야만 한다. 또한 그들에게 쏟아지는 사회적 눈총도 따라와서 그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몹시 피곤하다. 기실 再修라는 것이 재수 없는 사람에게 닥쳐 온 불행이라는 것을 알아채린 경우에 재수생들이 보여주는 강한 社會的 反抗은 社會的 規範을 어느 정도 허물어 뜨릴 만큼 심각하다. 그 뿐만 아니다. 마음에도 없는 대학이나 학과에 부득이 진학하고는 입학 첫날부터 불만을 터뜨리며 내년을 기약하는 이른바 자발적 재수생도 부지기수라고 하니 이 모두가 엄청난 사회적 낭비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대학교육 정책을 입안하여 집행하는 문교 당국이 구시대의 권위주의적 대학 정책을 수정없이 견지해 나가고 있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학은 현재 절적으르나 양적으로 많은 약점을 갖고 있다. 양적으로 볼 때 대학 입학 정원이 사회적 필요와 심각하게 동떨어져 있으며, 질적으로도 대학간의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약점을 극복하는 해답은 오히려 간단하다. 社會的 必要에 합당하게 대학 정원을 늘리고 새로운 교육 사업가가 자유롭게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현재처럼 문교 당국의 판단만으로 대학 정원을 조정하고 있거나 특정한 교육 사업가에게만 대학 운영을 맡기는 것은 현재의 약점을 더욱 더 증폭시킬 뿐이다.

大學教育의 機會均等 이룩되어야

우리나라 헌법은 제22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學問과 藝術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전문을 통해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각

人의 機會를 均等히’ 한다고 선언하고 헌법 제11조를 통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문교 당국은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기회 균등이 가능한 한 실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정책을 짜내야 하고, 특히 이 기회 균등의 정신은 대학교육에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한다. 自由民主主義 社會가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등등한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正義 原則이 변경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이를 조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 입시에 있어서 ‘능력에 따른 각 사람의 기회 균등’은 도외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A군이 특정 대학 특정 학과를 잘못 선택하여 학력고사 성적 몇 점 차이로 대학 입학을 거절당해야 하는 현실을 볼 때 현재의 대학 입시 제도는 不公正하고 不合理的이라고 본다. A대학 신문방송학과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A대학보다 커뮤티라인이 높은 B대학 신문방송학과에 응시하여 낙방했기 때문에 자기의 거주지로부터 1~2백 킬로미터 떨어진 벽지 소재의 대학으로 가든가 아니면 재수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차라리 엄청난 형벌이다. 능력에 따라 대우한다고 할 때 능력이라는 추상어의 개념은 개인의 학업 성적, 대학에서의 적응 능력 또는 체력 등 정신적·육체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수십 대 일의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선택 착오로 재수가 없이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개념은 결코 아닐 것이다. 앞서 말한 A군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수준 높은 사회다. 그러자면 터무니 없는 경쟁률(약간의 경쟁은 學業 水準 向上을 위해 오히려 활력소가 될 수도 있다)은 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터무니 없는 경쟁의 완화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수의 대학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점에 있다. 이런 현황 속에서 대학교육의

기회 균등은 공업분야이다.

失業者 증가는 杞憂에 불과

어떤 사람들은 대학 정원의 책정은 사회적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도 그와 같은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수 많은 대학 졸업생이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고, 많은 고등 실업자가 거리를 헤매는 현실로 미루어 대학 졸업생 수와 사회적 인력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무척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 체제는 修正資本主義體制이고 주로 市場經濟 社會이기 때문에 인력 수급 계획을 관청이 주도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오히려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계획 경제 사회가 아닌 한 대학 졸업생 수와 신규 고용 수요를 맞춰 보려는 발상은 무위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이 필자의 소박한 경험담이다.

실제로 볼 때, 대학 졸업자가 갖게 되는 직업이 반드시 그가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와는 동떨어진 경우가 더 많으며, 때로는 대학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도 흔하다. 실령 사회적 수요를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대학은 미래 사회의 담당자를 양성하는 기관인 만큼 당장의 인력 수급보다는 4~5년 후, 아니 10년, 20년 후 나아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며 인재를 키우고 교육을 베푸는 것이 대학의 正道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오늘의 대학 정원 정책에 대해 주요한 시사를 던져주고 있는 사례를 1950~'60년대에 찾아 보고자 한다. 즉 1950년대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産業 豫備軍에 편입되었던 많은 학사들이 1960년대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끈 주역이었다는 점 말이다. 제2의 도약이 가능하다는 2000년대를 앞두고 경제적 여력만 있다면 누구든 대학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는 대학 졸업자들이 아무런

주저없이 화이트 칼러 관리직이든 블루 칼러 기능직이든 공개적인 취업 경쟁을 통해 직업을 선택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때가 되었음을 국민 모두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곧 직업의 귀천이라는 헛된 평판을 없애고 就業 平等을 통한 사회적 평등을 더욱 擴充하는 길일 것이다. 그런 만큼 대학 졸업자 수의 증가와 고등 실업자 증가 간에 어떤 함수 관계를 엮으려는 시도는 부질없으므로 대학 설립의 자유를 반대하는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많은 소규모 대학이 自由設立되어야

비판자들의 논거에 공격을 가하면서 필자가 冒頭에서 선언한 대학 설립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유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입학 희망자에 비해서 대학 정원이 너무 적다. 그리고 대학의 수도 지나치게 모자란다. 상상을 초월하는 높은 경쟁률은 전·후기 대학까지 계속 이어진다. 따라서 대학은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의 설립도 수도권 지역을 지나치게 억제함으로써 대학생의 지방대학 逆流 현상이 일어나고 그에 따른 낭비가 엄청나다. 비록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인구의 효율적 분산을 지방대학 확충의 부수적 효과로 열거하지만, 대학 졸업자들은 졸업 후 대부분 원거주지로 돌아가거나 기업이 있는 공업 단지, 회사가 많은 상공업 중심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대학의 규모는 현재 수준에서 중앙과 균형을 맞춰 증원·증과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셋째, 교육 사업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선량한 자본가에게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대학 교육 사업의 自由 競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기회의 확충은 기성의 사학 제단으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인 大學 運營

方案을 강구하도록 자극하여 대학의 양적 성장을 질적 발전으로 전환시키는 동기를 부여하게 해 줄 것이다. 특히 대도시에 산재한 입시계 학원 운영자의 경우, 보다 쉽게 그 시설 일부를 개수하여 소규모 대학으로 전환시킨다면 자본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위의 이유에 근거하여 필자는 나름대로 大學設立의 自由에 따른 具體的 方案을 제시하겠다.

첫째, 소규모 단과대학을 보다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대학의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인문·사회계 대학의 경우에는 현재의 거대한 입시계 학원의 시설 변경만으로도 충분하게 하고, 이공계 대학의 경우에는 각종 산업체의 시설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면 오히려 국토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새로운 많은 사학 재단들은 학생을 모셔 오기 위해서 오히려 경쟁을 벌일 것이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수·연구 능력을 크게 지원할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 수 많은 단기대학이 그렇고 운동장도 없는 區立 중·고등학교가 그렇듯이, 그리고 대도시 대로변에 고색창연한 옛 건물로 남아 있는 소르본느대학이 그렇듯이 대학이라고 하여 반드시 대형의 현대식 건물, 넓다란 운동장, 아름다운 정원이 필수 시설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국토의 절대 면적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사회적 낭비라는 감도 든다. 만부득이 운동장이 필요하다면 이런 소규모 대학끼리 연합 운동장을 만들어 일별·시간별로 특정 학교에 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둘째, 대학의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大學의 國際化를 모색하고자 외국에 대학 분교를 설치하는 것처럼, 외국 대학의 국내 분교도 자유롭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선진 각국은 물론 제3세계권 국가의 사상과 지식, 기술과 정보가 자유롭게 토론되는 마당을 마련하는 것은 인류의 공동선과 세계 평화를 기약하는 길이요, 국내적으로도 보다 수준 높은 학문의 길을 여는 방도라고 생각한다. 물론 외국 대학의 분교가 설치되었을 때, 민족의 존립을 위협하거나 韓國 文化의 正體性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는 것은 일은 분교 당국의 일이 될 테지만 말이다.

끝으로 필자는 社會的 固定 觀念을 파기하고 현재 인위적으로 묶어 놓은 대학 정원, 특히 수도권 대학에 대한 통제 정책을 民主的으로 개선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면 하는 바람으로, 나아가 대학 정책에 대한 發想의 大轉換을 촉구하는 뜻에서 이 글을 썼음을 밝히며 활발한 토론을 기대해 본다. *